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91
----------	-------

발의연월일 : 2022. 10. 31.

발 의 자 : 김승남 · 김홍걸 · 최종윤
이원택 · 김민기 · 임종성
신정훈 · 소병훈 · 안호영
윤준병 · 김영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만들어진 후 전 세계는 기후변화 완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함.

특히 2005년 코스타리카와 파푸아뉴기니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개발도상국 산림 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RED)’을 제안한 후 세계 각국은 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탄소축적 증진활동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왔으며, 2015년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Warsaw Framework for REDD+, WFR)’를 통해 REDD+ 방법론이 완성되었음.

이에 산림청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과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캄보

디아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에서는 승용차 34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수준인 온실가스 65만tCO₂ 감축하며 배출권 발생에 성공함.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산림청이 REDD+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및 기업과 개인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활성화를 위한 정의와 산림청장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과 사업자에 대해 정의하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표준 등을 신설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평가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사업, 이를 담당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 설립 등을 위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

부터 제19조까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 전용과 산림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관련 활동, 그리고 산림의 보전, 지속가능한 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이란 「파리협정」 제5조에 따른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 전용과 산림 황폐화로 인한 배출의 감축 관련 활동, 그리고 산림의 보전, 지속가능한 관리 및 산림 탄소 축적 증진 활동과 신규조림, 재조림을 말한다.

제3조(산림청장 등의 책무) ① 산림청장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국민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이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파리협정」 및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 중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개발도상국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국내외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홍보 등 국외 산림탄소축적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국가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세부추진계획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계획연도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해당 연도

실행계획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실태조사등”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국내·외 추진 현황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공공·민간 부문 투자 규모 및 동향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및 모니터링 현황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협력국의 제도 및 이행능력 현황
5.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기술개발 현황
6.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필요한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전용 방지 활동
2. 산림 황폐화 방지 활동
3. 산림 보전 활동
4.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활동
5. 산림 탄소 축적 증진 활동
6. 신규조림
7. 재조림
8.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산림청장 외에 법 제9조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상 국가 제도 및 이행역량 강화,

시장 개척, 정보 제공, 사업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사업자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전문인력 양성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기술의 개발·보급
3. 그 밖에 산림탄소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① 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 및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최소화하도록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①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

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발굴 및 이행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표준)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파리협정」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운영표준(이하 “운영표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전용 방지 활동
2.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황폐화 방지 활동
3. 산림 보전 활동
4.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활동
5. 산림 탄소 축적 증진 활동

6. 신규조립

7. 재조립

8.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보급 촉진 등) ① 산림청장은 국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대학 등에 연구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위탁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분야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산림청장은 국외산

림탄소축적증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유지 및 강화
2.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4.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산림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9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 ① 사업자는 국외산림탄소 축적증진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및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 또는 산림청장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산림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임직원
2.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